

# 尹, '전두환 보도' 대상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 찾아

### “미국의 풀리처 못지 않은 훌륭한 전시 될 것 확신” ‘광주 재판날 출석 않고 동네 산책하는 전두환’ 선정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은 4일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을 찾아 “보도 사진기자들이 평생 수백만 번의 셔터를 누르는데 그 중에서 그야말로 몇장의 사진이 우리 사회를 바꾸고 또 역사를 변화시킨다”고 사진기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윤 당선인은 이날 오전 서울 광화문 한국프레스센터 광장에서 열린 제58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 참석해 “우리 대한민국 보도 사진전도 미국의 어떤 풀리처(Pulitzer) 사진전 못지않게 아주 훌륭한 전시가 될 것이라 확신한다”고 이같이 축사를 전했다.

58회 한국보도사진 대상 작품으로는 흥인기 한국일보 기자의 ‘광주 재판날 출석 않고 동네 산책하는 전두환’이 선정됐다.

윤 당선인은 “보도 사진은 그냥 보도 기록이 아니라 사진 기자의 현장 투혼과 철학이 담긴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저도 보도사진전이 개최가 되면 그동안은 제가 도저히 시간이 안 되면 할 수 없지만 웬만하면 꼭 와서 본다. (사진전이) 재미도 있고 이것이 우리의 역사이기 때문”이라고 했다.

그는 “국내 문제만이 아니라 세계 보도 현장에 뛰어들어서 종군 기자로서 해외 많은 어떤 사회 경제 인권 현장에 가서 우리 국민들에게 좋은 철학과 철학이 담긴 이 작품을 선사해주시길 기대한다”고 응원의 메시지를 보내기도 했다.

한편 박병석 국회의장은 “백문이 불여일견

은 한 장의 사진이 이야기를 한다”면서 “특히 추운 겨울날 서울역 앞에서 옷을 벗어주고 장갑을 벗어준 한 장의 사진은 독특한 현실에서도 우리가 따뜻한 것을 나눌 수 있다는 걸 보여준 감동적 장면이기도 했다”고 전했다.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는 “앞으로 걸어갈 때 고스란히 그 모습을 전달하기 위해서 앞으로 걷는 모습을 (찍기 위해) 뒤로 걷는 사진기자들의 노고와 열정들이 없다면 진실을 놓쳤을 것”이라며 “사진기자, 영상기자, 취재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고 진실을 전달하는 과정에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김은혜 대통령 당선인 대변인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에서 “대상작을 염두에 둔 (당선인의) 일정인가라는 질문에 “모든 역사와 사진으로 증거하는 모든 사실은 우리가 반면 교사를 하든, 아니면 새기든 어느 하나 소중하지 않은 게 없다”고 답했다.

한편 이날 사진전에 박병석 국회의장, 이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4일 오전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 광장에서 열린 '순간의 기록, 살아있는 역사' 제58회 한국보도사진전 개막식에서 20대 대통령 선거운동 당시 촬영된 자신의 어퍼컷 세리머니 사진을 감상하고 있다.

준석 국민의힘 당대표, 오세훈 서울시장, 이호재 한국사진기자협회장, 표완수 한국언론진흥재단회장, 김동훈 기자협회장, 임재청 한 국신문협회장 등이 참석했다. 최이슬기자

## 새정부 국정과제 초안 공유...安 “완성본 100이라면 10 정도”

### 각 분과별 3~5개 대표 과제...18일까지 2차 안 도출



안철수 대통령직 인수위원장이 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인수위원회에서 열린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제4차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가 윤석열 정부 국정과제 초안을 점검하고 공유했다. 각 분과별로 3~5개 정도의 대표과제로 요약한 것으로 이를 토대로 이만주 부처 분과별 토론을 통해 과제를 다듬어갈 계획이다. 인수위는 오는 18일까지 2차 초안을 만들고

다음달 2일까지 최종안을 확정해 당선인에 보고한다는 방침이다.

1차 초안에는 코로나19 방역대책 및 소상공인 손실보상 등 지원 방안, 새정부 핵심 구상인 디지털 플랫폼 정부 구축을 위한 정부 효율화 방안 및 공공부문 인력 재조정 등이 담겼을 것으로 관측된다.

또 주택 공급 확대 등 시장 안정화 방안, 탈원전 폐기 등 문재인 정부 정책의 정상화, 한미 포괄적 동맹 및 실용 외교 등 각 분과별로 윤 당선인의 공약 이행을 뒷받침할 과제들이 담겼을 가능성이 높다.

법무부와 마찰을 겪은 수사지원권 폐지, 검찰예산 독립 등도 포함됐을 수 있다.

다만 안 위원장은 “1차 과제는 그저 분과별로 논의된걸 독립적으로 나열한 것으로, 완성본이 100이라고 치면 이제 겨우 10정도”라며 공론화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어 “지금 다른 분과끼리 협력이라든지 중복된 것을 체크한것이이라든지 그렇게 전혀 없다”며 “이걸 기초해 새롭게 정리될 거라 그렇게 크게 관심 둘 필요는 없을 거다. 어느정도 완성도가 높아지고 국민 공론화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말씀드리도록 하겠다”고 했다.

서선욱기자

## 법무부, 없어진 '대검 인권부' 살린다

### 文 지시로 2018년 설치...추미아가 2년 뒤 폐지



추미아 전 법무부 장관 시절 없어졌던 대검찰청 인권부 재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법무부가 대통령직인수위원회에 보고한 것으로 파악됐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지난달 29일 인수위 업무보고에서 대검 인권부를 되살려야 한다는 취지의 의견을 냈다. 법무부는 조만간 대통령령인 '검찰청 사무규칙'에 관한 규정' 개정을 추진할 방침이다.

대검 인권부는 지난 2018년 6월 문재인 대

통령이 사건 관계인의 인권을 보호하기 위한 조직을 대검에 설치하라고 지시하면서 만들어졌다. 한달 뒤 법무부는 대검 인권부를 신설하고 일선청의 인권감독관을 12곳으로 확대했다.

하지만 추 전 장관은 2년 뒤인 2020년 9월 하반기 직제개편을 통해 검사장급이 이끌던 대검 인권부를 폐지하고 차장검사급인 인권정책관을 신설했다. 당시 법무부는 '검·인 유착', '한명숙 전 국무총리 위증교사 의혹' 사건의 검찰 주체를 두고 당시 검찰총장이었던 윤석열 당선인과 갈등을 빚고 있었다. 윤 당선인은 이 사건들을 인권부에 맡기려 했지만, 추 전 장관은 한동수 대검 검찰부장에 검찰을 지시했다.

법무부는 이와 함께 업무 분장 등 지휘 체계 상 혼선을 막기 위해 현재 비직제인 일선 청 인권보호관의 직제화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을 인수위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법무부는 지난해 7월 서울중앙·인천·수원·대전·대구·부산·광주지검 등 8개 검찰청에 인권보호부를 신설하고 전국에 인권보호관 34명을 배치한 바 있다.

오유나기자

## 호남신문 광고안내

광고주는 언론 종사자와 더불어 신문산업 발전의 동반자입니다. 한 분 한 분을 소중하게 여기고 단 한 줄의 광고도 감사히 지면에 반영하겠습니다. 믿고 맡겨 주십시오. 여러분의 기대에 신뢰로 보답하겠습니다.

기사제보  
(062)  
222-2580

광고문의  
(062)  
228-2580

## 축하·근조화환 전문점



### 전국 꽃배달 서비스

# 60,000

### 농장직영 광주꽃도매

직통전화 010-2400-7774

주문팩스 062-946-0053